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6**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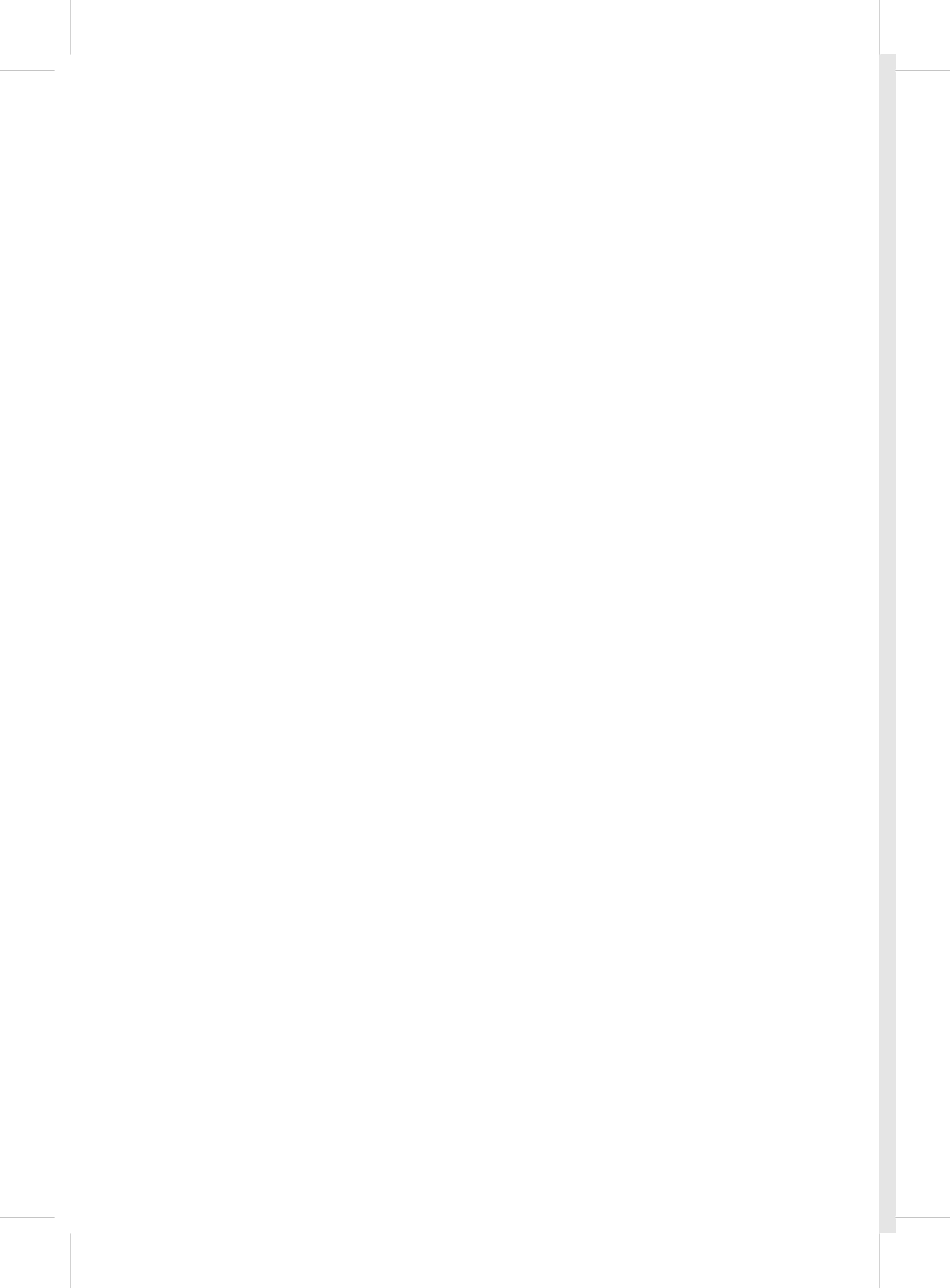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고, 지난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이며,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6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이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정의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친다.

2016. 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2016 의인상 수상자 소개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제보한 A, B 간호조무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수상자 선정사유

A, 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했다.

이들의 신고로 실시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확인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정부차원의 C형간염의 체계적 관리대책이 마련됐다.

수상자 소개

2006년부터 2015년 2월 중순까지 다나의원에서 근무하다 이직해 K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A 간호조무사는 2015년 10월 경 진료 차 다나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다나의원 내원 환자 18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염환자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한 A 간호조무사는 당시 다나의원에 근무 중이던 B 간호조무사와 함께 병원측에 대책을 물었으나, 도리어 다른 환자들에게는 감염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A, B 간호조무사는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양천구는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5월 이후 내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00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을 밝혀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건 중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다나의원 원장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면허자인 부인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일회용 주사 재사용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인 면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신고 후 A 간호조무사는 신분이 노출되어 다니던 K한방병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의 영업정리(직장폐쇄)로 퇴사처리 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수상자 선정사유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운영비 횡령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 인권위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해임, 인강원 시설폐쇄조치 명령을 내리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내부의 비리나 인권침해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우며, 혹 알려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등으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미 씨의 제보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바로 잡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기여했다

수상자 소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수당 갈취,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 제보하였으나 행정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를 진정했다.

인권위는 2013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보조금 횡령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진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후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 해임 및 인강원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임원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어 문제가 된
운영자들이 교체되었고, 인권위의 형사고발로 관련자들이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강재단은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하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김정미 씨는 제보를 이유로 해고되었는데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조치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피해를 호소한 발달장애인들이 제보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협박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했다.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수상자 선정사유

조한준 씨는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권익위와 논산시는 4월 12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논산시는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한준 씨는 사직을 각오하면서까지 제보를 감행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해당업체는 국내 유일한 소맥전분 제조업체로 업체에서 생산된 전분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 또한 크다. 조한준 씨의 제보는 관련업체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수상자 소개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에 근무하던 조한준 씨는 2016년 4월 4일 업체가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방충·방습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 제조에 같이 사용한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직접 증언하였다.

조한준 씨의 제보로 권익위와 관리당국인 논산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논산시는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은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업체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밀가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제7조)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업체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했다. 2016년 12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한준 씨는 제보 이후 업무상 피해를 받게 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진 퇴사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수상자 선정사유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통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원료의약품 허위 제조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 수사로 원료의약품 밀수입 사실 등이 적발되었다.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다. 최성조 씨의 제보를 통해 제약회사가 약가우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공개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제약회사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메시지가 주목받았다.

수상자 소개

한국유나이티드제약회사에 근무했던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하였다. 그러나 제보 후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최성조 씨는 2016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실에 다시 제보하였다.

2011년 최성조 씨의 제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해 9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9개 품목을 허위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또 검찰은 2013년 5월 원료의약품 밀수입 및 부정수입 혐의를 적용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벌금 및 추징금을 총 9억 5천만 원을 약식 청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최성조 씨는 2010년 5월 “회사가 성과를 불법으로 창출하며, 비리와 편법, 문서위조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었으나, 최성조 씨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사에 반환하였다. 제보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제보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며 최성조 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수상자 선정사유

김철우 씨는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당시 수원여자대학교 직원이었던 김 씨가 총장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총장의 비리를 밝히고,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수상자 소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수원여자대학교 이재혁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에서 근로관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기사화한 중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노조원들이 농성에 대비하여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등을 지출했다.

당시 수원자대학교 직원으로 기획팀장을 맡고 있던 김철우 씨는 2012년 12월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고발 당시 김 씨가 수사기관에 내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김 씨를 2015년 1월 28일 파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와 2015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 준수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이재혁 총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수상자 선정사유

조성열 씨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돕는 서울시립기술원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성심을 다하였고, 직원 급여지급 과정에서 부정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또한 조 씨는 1999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해, 서울시로 하여금 재단이 착복한 예산 2억 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재단의 보복조치로 급여 미지급, 따돌림, 형사고발 등에 시달렸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끝내 재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조성열 씨는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전립선암으로 끝내 2016년 7월 5일 별세했다. 조 씨는 사후 자신의 몸을 대학 해부학의 발전과 교육 및 연구용으로 기증함으로써 살아서는 스스로 무엇이 참된 용기인지를 보여주었고, 사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인은 한평생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수상자 소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의 직원이던 조성열씨는 위탁운영업체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1999년에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조 씨의 제보 내용은 상희원의 이사장 유호준이 조성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4년간 수련관의 체육관, 소극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시로 입·출금하여 1억 2천 여 만원을 조성한 뒤 이사장 판공비와 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 수익금을 공식 장부에서 누락해 약 6천여만원을 별도로 조성 관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비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상태였다. 조 씨의 제보를 접수한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에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청구를 접수한 시민감사관은 유호준 이사장의 비리행위와 약 2억 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고 적발된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변상과 수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상희원에 대한 허가 취소, 증여받은 광업권의 권리보전 절차 이행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에 권고하였다. 서울시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법인을 변경하고 유호준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유 이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장의 지시로 통장을 만든 조 씨만 기소돼 2001년 11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2003년 조성열 씨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6

1990~2000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10.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15.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2005

17. 진웅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24. 조연희 등 동일여고 교사들의 사립학교 비리 제보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적십자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27. 김용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30. 심태식·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31. 김종년 영덕여고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32.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33. 전용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34.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자원예산 낭비 제보

2006~2010

35. 박경옥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36.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37.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38.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39.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40.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41.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42.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43.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44.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45.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46.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47. 유명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48.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49.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50. 이두희 씨의 군중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51.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2016

52.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53.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54.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55.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56.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57. 윤상경 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58. 이해관 KT직원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59.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60. 안중훈 동구마케팅고 교사의 학교비리 제보
61.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62.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63.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64.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65.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66.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67.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 고발
68.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69.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70.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71.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72.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73.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74.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75.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76.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77.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78.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79.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80.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 제보
81.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의 임의설계변경, 예산전용 문제 제보
82.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83.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 제보
84.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85. A, B 간호조무사의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86.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2월말,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 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1989년 감사원 2국 4과에서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고, 한겨레는 이를 1990년 5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하였다.

이 감사관의 공익제보는 전세값 폭등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시점에 나온 것으로, 재벌들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즉 투기성 보유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했음에도 이를 업계로비에 밀려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감사관은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사표를 종용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감사관

이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고 공무원 비밀누설죄로 5월 14일 구속하였고, 감사원에서는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전 감사관의 행동을 폄하했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6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은 상당부분이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감사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에 복직했고,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이 감사관은 시사저널 '올해의 인물'(1990), 한국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인물'(1990), 브리태니커 세계연감 '1996년의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퇴직 후 민주노동당 부대표 및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등을 맡았다.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복무 중이던 윤석양 이병은 보안사가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영삼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김수환 추기경 등 정치인 및 민간인 약 1,300여 명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1990년 10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윤 이병은 군 복무 중이던 1990년 7월 혁노맹 사건

피의자로 보안사에 연행됐다. 그는 프락치로 일하라는 강요를 받고 혁노맹 조직원 검거를 위한 수사 협조를 시작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중 공익제보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있던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개인신상 서류철, 컴퓨터 디스켓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였다.

국방부는 '전시나 계엄령이 선포된 때에 대비하여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대상자들을 보호 및 차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명하였다. 또 윤 이병의 제보를 운동권세력과 연대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행위로 매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불법사찰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상훈 국방부장관을 해임하고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대기발령하는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던 보안사 서빙고 분실은 폐쇄하고 보안사는 1991년 1월부로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하였다.

보안사 사찰대상이었던 노무현,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등 각계 주요 인사 14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998년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2백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과 수사 활동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종교인, 교수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윤 이병은 기자회견 후 특수군무이탈혐의로 수배되었다가 1992년 9월 체포되어, 군사법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4년에 만기출소하였다. 윤 이병은 1990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제4회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육군 9사단 22연대의 이지문 중위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였다.

이 중위는 중대별로 실시된 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80% 이상 나오도록 하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중대장들이 사병들에게 여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했으며, 그가 소속된 6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무사 파견대 보안반장이 중대장을 개인면담하여 정신교육 실시를 강요했고 결국 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 또 다른 중대장들로부터, 본부중대의 경우 인사계 주임상사가 보는 앞에서 기표하는 공개투표가 있었고 5, 8중대는 기표소 앞에서 1번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500여 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고발동기에 대해서도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방부는 이 중위를 무단이탈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공선협>과 언론사 등에 200여 명의 현역군인들이 익명으로 군부재자 투표부정에 대해서 제보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고발로 국방부는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씨의 공익제보를 통해 군대 내의 부정투표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그의 제보 이후 군부재자 투표제도는 영외투표로 개선되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체포된 이 씨는 기소 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되어 1992년 5월에 불명예 전역조치되었다. 하지만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강등처

분취소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고, 1996년 4월에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를 맡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한준수 충남 연기군수는 1992년 8월 31일, 같은 해 3월 24일에 치른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벌인 관권·금권선거 비리를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폭로하였다.

한 군수는 당시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내무부장관과 충남도지사의 지시로 군수에서 이장까지 공무원조직이 총동원되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그는 유권자 개인별 성향파악 명부, 돈 매수실태, 대선대책보고서, 선거용으로 살포된 수표 등 증거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한 군수는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충남도에서 받은 2천만원과 군에서 자체 조달한 4천만원 및 당시 민자당 후보가 낸 2천 5백만원 등 총 8천5백만원 중을 총선 직전 7개 읍면 196개 마을에 각 10만원씩, 친여 성향의 2,100만가구에 각 3만원씩 읍장과 이장 등 행정 단위 조직을 통해 살포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증거물로 충남지사가 내려보낸 선거관련자금 2천만원 중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과 선거지침서 등 공

문서 15종을 공개했다.

정부에서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그 해 말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흑색폭로라면서 고발내용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인사 불만에 의한 작위적 폭로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여당을 탈당하고 중립을 선언했고, 중립내각이 출범했다. 그의 공익제보는 관권 부정선거의 실태를 뒤늦게나마 드러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종국 당시 충남도지사, 여당 후보와 함께 한준수 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한 군수는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고초를 겪었다. 다행히 같은 해 8월 한 군수는 사면복권되었는데, 양심선언의 대가로 파면되었기에 연금의 절반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경기도 광주시의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센터 '헤인원'(동산원)에 보육사로 근무하던 정광용 씨는 한국발달장애센터 헤인원(동산원)의 비리사실을 1994년 3월 장애인 전문 월간지<함께 걸음>과 <장애인복지신문>에 제보하였다.

정 씨는 헤인원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수용하면서 보호자들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은 후 그들을 무연고자로 신고하고, 보호자들로부터는 헤인원에 입소시킬 때 수백만 원에서 2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횡령하였고, 매달 일정한 후원금을 받아 이를 헤

인원 공식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하였다. 친권포기각서에는 “해인원에 수용된 장애아동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했다.

최창수 당시 해인원 이사장의 지시로 1994년 3월 문서 참고 정리 작업이 있었고, 친권포기각서, 예금 통장 등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우연히 시계

를 찾으러 소각장을 찾은 정씨가 타다 남은 문서를 주웠다. 당시 총무로부터 버리라는 지시를 받은 정씨는 이들 문서를 복사한 뒤 최창수 이사장의 운영 비리를 세상에 알렸다.

정 씨의 공익제보로 1994년 9월 이사장이 바뀌었고 10월에 원장이 새로 부임했다. ‘해인원’의 이름도 ‘동산원’으로 바뀌었다.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서울 양천경찰서 신청1파출소에 근무하던 김석원 경장은 당구장 등 관내 업소로부터 경찰관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미성년자 출입 등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었다는 사실을 1994년 8월에 SBS 등 언론에 제보하였다.

언론제보에 앞서 김 경장은 파출소 내의 이런 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1994년 6월에는 상급 관서인 양천경찰서에 보고하기도 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그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제보는 서울지방경찰청 감찰요원들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내 업소들은 입을 맞추거나 몸을 사리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공익제보한 김 경장에게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여 도리어 김 경장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김 경장은 8월 29일 파면처분을 당했고, 김 경장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파면처분 취소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초를 겪었다.

*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6일 김석원 전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서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김 씨와 함께 제출하는 등 김 경장을 지원하였다.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웅진축협 상무대리로 근무하던 김필우 씨는 백령도에 상주하는 해병 6여단에 부식을 납품하던 웅진축협이 군부대 보급참모, 선임하사 등과 짜고 물품을 납품하지도 않고도 납품한 것처럼 각종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9천5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1994년 10월에 참여연대에 제보하였다.

김 씨는 참여연대에 제보하기에 앞서 상급자에게 전말을 보고하였으나 묵인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1993년 11월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축협으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받았다.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 웅진축협과 군부대간의 군납비리 국정 감사촉구 서한을 보내고, 축협 중앙회 회장에게도 군납비리 시정촉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나 군 관련자 일부만 징계받는데 그쳤다. 한편 축협은 김 씨를 상무대리에서 일반창구직원으로 강등하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내리고 1995년 10월에는 면직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1996년 11월 ‘부당전적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군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더

이상 이런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김 씨는 2002년 인천시의회 의원이 되어 서해 5도 주민의 배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동을 한 바 있다.

* 참여연대는 김필우 씨의 제보를 받은 후 국회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1996년에는 웅진축협에 근무했던 축협 직원 3명을 '국고금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김필우 씨를 지원하였다.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엘지(LG)전자 직원이던 정국정 씨는 자재를 고가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가는 비리를 1996년 11월에 회사 감사팀에 제보하였다. 그의 제보 후 구매 담당자와 납품업자가 징계를 당하고 8천 500만원이 회수되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며 정 씨는 고초를 겪기 시작했다. 그는 2년 간 연거푸 승진에 누락된 후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퇴직을 강요받았다. 회사는 그가 퇴직원 제출을 거부하자 그를 대기발령낸 후, 전자메일ID 몰수, 사물함 회수 등으로 괴롭히다

그를 따돌릴 것을 지시하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정 씨는 결국 무단 외출이라는 명목으로 2000년 징계 해고되었다.

그는 이후 12년 간에 걸친 복직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결국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이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서 최종 패소하였다. 정국정 씨는 2006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6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현준희 감사원 주사는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효산그룹이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그의 기자회견 이후 효산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공사도 취소되었으며,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 대출한 사실 등이 밝혀져 현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부속 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 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파면하였고,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한 감사원 간부는 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은 그를 기소하였다. 현 씨는 1996년 1심 재판 이후 무려 12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1997년 1심 재판과 2000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하지만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고 2008

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헌 씨의 양심선언은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면처분취소소송은 패소해 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현준희 씨는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8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 씨를 법률지원하였다.

10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은 국방부의 외국 무기부품 구매 예산낭비를 1998년 2월에 언론에 제보하였다.

박 담당관은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직속상관에게 무기부품 도입실태를 보고하고 국방예산 절감과 건전한 외자입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외자경쟁 입찰의 최저가입 입찰체 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는 조직을 욱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혀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에 박 담당관은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서 1998년 2월 언론에 제보하였

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박 담당관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그의 고발로 연 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에 대해 감사의 눈길이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감사원이 국방부 조달본부가 65센트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제보 후 1999년 초 국방부는 가격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조달정보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제보 후 행정과 도시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은명하였다.

고 박대기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2 의인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을 지내고 퇴직한 정경범 씨는 자신이 가담한 사건을 포함해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1998년 5월 <나의 31년 공직생활, 부끄러운 부정부패 일기장>이라는 책을 통해 양심선언하였다. 정 씨는 이 책에서 일선학교의 인사부조리에서부터 각종 공사와 학교급식을 둘러싼 비리, 학교비자금 조성방법, 교육청 종합감사 시 감사직원에게 학교공금으로 접대비 지불 등 교육현장의 갖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검찰은 정 씨가 책을 통해 밝힌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 광주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과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자체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이 드러난 초등학교 교장 3명과 서부교육청 서기관 등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정 씨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법무부의 ‘내부공익제보자는 죄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는 방침과 ‘횡령한 돈을 되갚고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석방되었다.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약품구매 관련 비리를 1998년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개혁통신>에 폭로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발행되는 <개혁통신>에 기고하는 형식을 빌어, 병원에서 약을 구입할 때 임상연구비, 기부금, 장학금, 학회 참가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비밀스러운 거래들이 오고가며, 제약사들이 병원들로 하여금 자기 회사가

만든 약을 대량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랜딩비'라는 명목의 채택료를 내고, 그 후에도 상납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과 대학병원들이 비싼 3차 항생제부터 쓰는 일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고발했다.

의사협회는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동료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 검수원들인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석명한 씨는 '도시통근형 동차 및 새마을 열차의 보수품 유용과 하자보수의 문제점과 축상발열로 인한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1998년 10월부터 시민단체 <도시연대>와 <한겨레신문>에 제보했고 12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다.

이들은 열차수리 때마다 부품이 없어서 운행하고 돌아온 차량의 부품을 빼 임시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져 왔으며,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열차바퀴의 축이 부러져 열이 나고 탈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축상발열' 현상이 자주 발생해 운행정지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차원에서 리본투쟁과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제보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의 제보내용이 보도된 후 철도청은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보다는 제보자를 알아내는데 주력해 결국 1999년 4월에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

로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씨는 파면조치를 하였으며 조항민, 석명한 씨에 대해서는 감봉과 지방전출 조치를 했다.

이들은 징계무효처분소송을 제기했는데, 황하일 씨는 2001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외부에 알린 공익적 제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승소했으나, 2002년 7월 대법원이 철도청의 손을 들어 주어 파기환송되었고 안타깝게도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황효열, 윤윤권 씨는 2000년 5월 법원에서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하였으나 철도청은 다시 각각 3개월 감봉 및 2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감봉·전출 징계를 받았던 조항민 씨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참여연대는 1999년 9월 황하일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무효소송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그들을 법률지원하였다.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병무비리 사건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던 K씨는 국방부 고석 검찰부장(중령)이 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를 위해 병무비리 정보제공자인 K씨의 신원을 노

출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1999년 10월 언론사와 참여연대에 제보하였다.

K씨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병무비리를 수사하고 있던 국방부 검찰부에 1998년 중순부터 참여해 병무비리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부장을 맡고 있던 고석 중령은 그의 신분 및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라고 지시하고, 그의 합류 후 1999년 4월까지 병무비리 수사는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그런데 K씨의 제보에 따르면 1999년 4월 병무비리 1차 수사결과 발표 후 고석 중령은 K씨에게 수사기밀 사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태도가 돌변하였다. 당시 국방부 검찰부는 병무비리 수사에 관한 중요한 기밀사항이 기무사 등에 유출되는 현상이 있어 보안 대책을 강구했고 K씨도 자신의 지휘감독자인 이 모 검찰관에게만 수사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정보제공을 거절당한 고석 중령은 병무비리 수사로 구속된 이들에게 수사정보 제공자인 K씨의 신분을 누설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주요 피의자들이 수사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2차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고 중령이 기무사에 수사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팀내 불만도 커져갔다. 결국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기무사 장성들의 비리혐의는 파헤치지 못하고 병무비리 수사는 종결되었다.

K씨의 제보를 접한 참여연대는 그 해 10월과 12월 각각 대통령에게 질의서와 공개서한을 보내 병역비리 수사에 있어서 수사정보제공자 누설과 수사 축소 의혹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청했고, 11월에는 고석 중령을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부에 고발하였다.

군검찰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고 군법원 역시 참여연대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2002년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아들 병역면제를 둘러싼 공방과정에서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관들이 고석 중령의 수사방해, 축소 은폐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15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의 직원이던 조성열씨는 위탁운영업체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1999년에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정 씨의 제보 내용은 상희원의 이사장 유효준이 조성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4년간 수련관의 체육관, 소극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시로 입·출금하여 1억 2천 여 만원을 조성한 뒤 이사장 판공비와 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 수익금을 공식장부에서 누락해 약 6천여만원을 별도로 조성 관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비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상태였다. 조 씨의 제보를 접수한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에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청구를 접수한 시민감사관은 유효준 이사장의

비리행위와 약 2억 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고 적발된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변상과 수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상희원에 대한 허가 취소, 증여받은 광업권의 권리보전 절차 이행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에 권고하였다. 서울시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법인을 변경하고 유효준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유 이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장의 지시로 통장을 만든 조 씨만 기소돼 2001년 11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2003년 조성열 씨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으로 일하던 정태원 감리원은 인천국제공항 공사 감리 과정에서 내화·불연·방수처리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 사례와 부적절한 설계변경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나 감리단이 이를 덮은 사실을 2000년 7월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제보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하였다.

제보하기에 앞서, 최우수 감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정 씨는 부실공사를 따지는 감리원들을 시공사 직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2000년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주고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시공사 측의 조직적 반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 감리원은 공사 현장의 자재 샘플과 직접 채집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인천공항공사측에서는 부분적으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모두 시정 조치 했기 때문에 전체 공정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객터미널 방수재 선정의 문제로 인한 방수기능 결함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제보 후 시민단체 활동을 하였고, 건설업계로 복귀하려 했으나 업계에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17 진용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진용용 교사는 학비지원체계의 문제나 학생들에게 청소용역비를 징수하던 문제, 학부모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문제 등 불법 부당한 학교 운영을 2001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민원실에 제보하였다.

그러던 중 용화여고의 '야간자율학습' 강요 문제를 서울시교육청 인터넷게시판에 쓴 학생이 2002년 10월에 퇴학을 당하자, 구명운동을 벌이다 2003년 10월 파면되었다. 학교 측이 내세운 파면 사유는 '무단결근', '불성실 수업',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등 여러 가지였으나, 몇 년 동안 진 교사가 학교 재정 문제 등 법인과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자

못마땅하게 여긴 학교 측은 퇴학 학생 구명 운동에 적극 나선 그를 파면시킨 것이다.

파면된 이후 진 교사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학내외에서 촛불 시위 벌이는 등 학내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쪽에 복직을 권고했으나 재단이 따르지 않았고 교육청의 재심 끝에 2004년 4월말 복직이 결정되었다.

진용용 씨는 2003년에 반부패국민연대(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3회 반부패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으로 복무중이던 차원양 소장은 2001년 10월 1일에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 인사 실상을 고발함' 이

란 글을 올려, 장군현황 국정감사 허위보고와 군 인사 편중 문제를 폭로하였다. 비록 익명이었지만 현역 장성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육군의 진급심사

제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 소장은 소령 이하의 하위 계급은 ROTC 및 3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령이나 장군 등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율이 높아지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는 44명의 장군 진급자 중 육사출신이 31명, ROTC가 5명, 갑종(3사가 생기기 이전의 장교 임용제도) 8명으로 균형을 유지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소장은 특정 출신이 진급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전체 진급 인원 중에서 육사 출신을 몇 명 진급시킬 것인가를 사전에 참모총장의 사전 결재 아래 결정해 놓고 잔여분에 한하여 ROTC, 3사 등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급 공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차 소장이 올린 글은 바로 삭제되었고 게시자를 파악한 국방부는 10월 9일 차 소장을 보직해임했다. 차 소장은 10월 말 전역 지원서를 내고 2001년 11월 10일, 34년 간의 군 생활을 정리했다. 차 소장은 전역 후 대학 강의를 매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문제제기 이후 군 인사체계가 개선된 점에 만족했다.

* 참여연대는 육군 장군 현황을 국회에 허위보고한 국방부에게 그 경위를 따지고, 국방부가 차 소장에게 보직해임을 비롯해 보복성 조치를 주려는 것을 비판하는 공문을 2001년에 국방부에 보냈으며, 2002년 1월 차 소장이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 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률지원하였다.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충남 서산의료원에서 원무과장 및 총무과장을 지낸 지용호 씨는 서산의료원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장의업자에게 65명의 영안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아, 평당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계산한다면 5억 원 상당의 수입을 저버려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내용을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 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신고는 그해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접수한 첫 공익제보였다. 그는 장의업자 녹취서, 의료원 사업

세입세출 예산서 등 12종류의 입증서류를 제출했다.

지 씨는 이 제보에 앞선 1994년 4월에도 충남 도지사에게 서산의료원이 지방공사로서 입찰 등을 통해 약품구입을 해야함에도 '선납품 후계약'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장부상의 기재와 재고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안산시 공무원이던 김봉구 씨는 안산시장과 안산시 공무원들이 안산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38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낭비했고 그 과정에 업체와 결탁할 의혹이 있다는 것을 2002년 2월에 참여연대에 제보하였다.

1997년부터 안산시청 시설공사와 계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 씨는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해 안

산시가 한 건축사무소와 체계한 용역계약중 기본설계비(13억원)와 실시설계비(38억원) 집행은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 사태로 건립비용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산시장은 그를 상수도사업소로 좌천시켰다.

그 후 실시설계비가 집행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

자, 김 씨는 참여연대에 제보했고, 2002년 4월에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 환수와 관련자 징계 및 공익제보자 신분원상회복 요구를 담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안산시 측은 2002년 11월에 김 씨를 안산시 반월동사무소로 발령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안산시에 김 씨를 분청인 안산시청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03년 3월에 내렸고,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안산시에 과태료 500만원을 같은 해 4월에 부과했다. 안산시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산시는 과태료 확정판결(2004.7) 후인 2004년 9월에 김 씨를 안산시청 건설과로 인사발령했다.

한편 김 씨는 참여연대의 법률지원을 받아 안산시장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과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3년 6월에 냈고, 2009년에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2006년에 스스로 공직을 그만 두었다.

김봉구 씨는 2003년 반부패국민연대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3회 반부패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김봉구 씨의 제보를 받고,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동으로 신고하고 김 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법률지원하였다.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김태진, 김준 씨 등은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가 기술료 약 5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2002년 3월에 언론에 제보하였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은 평가원이 적합한 기술료 498억원은 산업기술개발에 재투자해야 할 용도의 자금인데, 산자부가 이 자금을 민간법인에게 부당하게 지원하고 해당 법인이 이 자금을 이용해 21층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제보는 그 후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산업자원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비 낭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방송보도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을 검토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2년 5월 기술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밀빠진 독상"을 수여했다.

한편 평가원측에서는 이들의 제보로 인해 상급기관인 산자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2003년 6월에 취임한 신임 원장은 7월에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12월에 해고하였다. 다행히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판정을 받았고, 2004년 9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내부고발로 인한 해고로 보아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고, 그 해 11월에 복직할 수 있었다.

이들은 2004년에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여한 '4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조 대령의 제보는 F-X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

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주형 대령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행동은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또 “F-X 시민백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에 “F-X 시민백서”(도서출판 나눔)를 출판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조 대령을 2002년 4월 F-X 기종 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는 고초

를 겪었다.

하지만 외압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되는 국방부의 차기전투 사업을 폭로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 대령은 2003년에 제2회 안중근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참여연대는 조 대령의 공익제보를 계기로 F-X 사업 외압의혹 규명과 F-15K구매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조주형 대령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군사기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조 대령의 변론을 지원하였다.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최강욱 군법무관은 국방부 김창해 법무관리관(준장)의 수사활동비 횡령 혐의 등을 2002년 참여연대에 제보하였다.

최 군법무관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이 육군 법무감으로 근무하는 2000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2개월 동안 검찰수사비 총 1억 6천여만 원 횡령, 허 모 준위 군용물 절도 사건 청탁 개입, 서 모 중령 군용물 횡령 사건 개입, 이 모 준장 뇌물 수수 사건 개입 등의 비리혐의가 있다는 점을 제보하였다. 최 군법무관의 제보를 접수한 참여연대는 그해 10월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형법상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였다.

피의자 신분의 김 전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제도의 특성상 자신이 군검찰관 보직권을 가진 것을 기회로 측근 인사로 담당 검찰관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결국 국방부 보통검찰부가 2003년 2월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02년 10월 중순부터 진행된 국무총리실의 직무감찰과 2003년 6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국방부는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다가 김 법무관리관에게 2003년 7월 9일 보직해임조치라는 사실상 전역 조치를 내렸

고, 11월 30일에 전역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군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맞서 2003년 3월에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김 법무관리관이 전역함에 따라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신영철)으로 이첩되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김창해는 전역 직후 2003년 12월 15일에 육군 법무감 재직 시절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는 군사법제도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향후 참여정부 ‘군사법제도 개혁’ 작업의 중요한 단초가 되었으나, 법적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강욱 군법무관은 전역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4 조연희 등 동일여고 교사들의 사립학교 비리 제보

서울 동일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던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교사는 학내의 각종 회계 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2003년 3월 학교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의 제보는 2003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이끌어 내었고, 감사결과 동창회 입회비 불법 모금과 부당사용, 위탁급식 시설비 기부채납금 부당 징수 등의 비리사실이 확인되었고, 16억원의 회계비리가 밝혀졌다. 그 결과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 5천 여 만원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의 조치와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5명은 형사고발조치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동일학원 재단은 이들 교사들을 불법집회·명

예훼손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 학교는 이들을 해임했다. 이어진 교육부 소청심사위에서는 조연희 교사에게는 해임을, 박승진, 음영소 교사에게는 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파면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조 교사를 2012년 광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하려 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 세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은 2006년 8월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판결로 종결되었고 조 교사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씨는 2005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5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KT에 근무하던 조태욱 씨는 KT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상품 판매를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허위매출 실적을 올렸다는 사실을 2003년 5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조 씨는 KT가 매출액 확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PCS 폰 판매를 강제로 할당했고 직원들은 일단 자기 봉급으로 휴대전화를 사서 책상 속에 넣어놓았다가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명의 변경을 해주거나 직원 한 사람 앞으로 수 백 개의 전화를 가개통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일로 인해 KT는 2003년 7월 통신위원회로부터 29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당시 조 씨는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에 자료를 제공했고, 그는 2004년 8월 21일자로 해고되었다. 조 씨는 그 다음날인 22일부터 72일 동안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앞에서 각각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벌였다. 다행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조 씨는 같은 해 12월 복직했다.

26 김용환 씨 등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적십자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대한적십자사에 근무하던 김용환, 임재광, 이강우, 최덕수 씨는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B·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 수혈용과

의약품 제조용으로 유통시킨 사실을 2003년 8월 언론에 제보하고 9월에는 참여연대의 지원을 받아 부패방지위원회에도 제보하였다.



이들의 제보를 받은 부패방지위원회는 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를 부패행위로 인정하고 9월 말 경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2003년 12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십자사가 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을 시중에 유통시켜 이 혈액을 수혈받은 9명이 B, C형 간염에 걸렸으며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99명의 혈액 309건을 병원과 제약사에 공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후 대한적십자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혈연구원장 등 3명을 해임하는 등 10명을 징계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장과 사무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인 혈액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혈액안전관리에 진전이 있었다.

한편 적십자는 에이즈환자 비밀누설혐의로 이들을 고소해, 검찰이 이들을 2003년 12월 4일 긴급 체포했지만 감사원 특별감사에 의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져 풀려났다. 또 적십자측은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04년에 개최해 해임을 결정했으나, 다행히 부패방지위원회의 징계철회 권고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감안해 징계조치를 철회하였다.

김용환 씨는 그 후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았고, 김용환 씨를 비롯해 4명의 공익제보자들은 2004년 반부패국민연대(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4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김용환 씨 등의 부패방지위원회 신고를 지원하였으며, 이들을 징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적십자사측에 전달하였다.

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우리카드’사의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에 근무하던 김승민 씨는 ‘우리카드’사가 고객동의없이 대환대출하는 방법으로 연체율을 낮추는 조작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2003년 9월에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김 씨가 금감원에 제보한 내용은 우리카드가 고객 동의 없이 조직적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카드연체율을 실제보다 크게 줄였다는 것이었다. 그의 제보내용을 접수한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다가 2004년 6월 한겨레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고,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한편 김 씨의 제보를 받았던 금감원은 제보를 받은

바로 그날 우리카드쪽에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줬고 그 때문에 김 씨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함께 회사에 다니던 그의 동생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6월 한겨레가 이 사건을 보도하자 금감원은 김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우리카드측은 김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다행히 경찰에서는 그를 무혐의처리했다.

김씨는 2004년에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여하는 ‘제4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강원도 고성군청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이정구 씨는 함형구 고성군수가 민원인의 땅을 직접 사들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민원인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실을 2004년 1월에 언론사와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제보했다.

이 씨에 따르면 고성군수는 건축을 불허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했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시키기 위해 준도시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둔갑시키고 조례에도 없는 해안경관지역을 만들었다. 이 씨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민원인을 위해 건축 불허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증언했지만 강원도청이 고성군의 서류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민원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행정심판 이진인 2003년 5월 이 씨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군수의 비리를 증언한 군수 측근과 함께 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위원회 직원과 검찰 조사관은 “추후에 꼭 조사할 테

니 기다리라”며 관련 자료들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의 연락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이 씨는 2004년 1월 양심선언을 한 후 위원회에 고발 내용을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사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상급 기관인 강원도청에 감사를 이관했으며, 결국 강원도청은 행정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군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 어느 기관도 군수의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씨는 제보를 한 직후인 2004년 2월에 비밀누설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했으나 소청심사결과 3개월 정직처분으로 같은 해 10월에 경감되고 복직했다. 하지만 군청이 아닌 고성군 토성면 사무소로 배치되었다.

이정구 씨는 2004년 반부패국민연대(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4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김이섭 연세대 독문과 강사는 2004년 1월 연세대 홈페이지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연속으로 올려 독문과 교수들의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횡령 의혹을 폭로했다.

김 강사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과 연세대 총학생회, 연세대 대학원총학생회 등은 독문과 교수 5명을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고 발했고 이들은 기소되었다. 범인은 이와 관련, 독문과 교수 5명 중 3명의 ‘연구비 유용 혐의’를 인정하

고 이들에게 벌금 1천만 원, 벌금 5백만 원, 기소유예 판결을 각각 내렸다. 이어 연세대는 해당 교수들에게 정직 2개월, 견책, 구두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학교 징계가 끝난 해당 교수들은 강의를 시작하는 등 제자리로 돌아왔으나 정작 공익제보자인 김 씨는 2005년 이후 강의를 맡지 못했다.

김이섭 씨는 2004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4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30 심태식·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심태식 교사와 민경대 교사는 2004년 이후 본인들이 재직하던 학교의 회계

비리 문제를 비롯해 서울지역 각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던 비리를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 부패방지위원

회 등에 꾸준히 제보하였다.

이들은 2004년 2월 민 교사가 재직하고 있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비리 행위(교무실 사무집기 등을 시장가의 3배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전자공개입찰을 피하려고 1천만원 미만으로 쪼개어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다. 또 2010년 4월에도 민 교사가 재직중이던 서울청룡초등학교에서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다. 그 외에도 이들은 2012년까지 서울 시내 초등 및 중학교 20곳 이상에서 발생한 학교

물품구입과정의 비리, 단체체육복 강제구매, 시설 바닥재 위해성, 캐노피 부실공사, 불법회계 등을 파헤쳐 교육청 등에 신고했으며, 이들의 제보 이후 실시된 교육청 감사를 통해 제보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다음카페 <교육행정정보공개 맑은누리>의 공동 운영자이기도 하며,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2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31 김중년 영덕여고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경북 영덕여고 교직원이던 김중년 씨는 영덕여고 박 모 이사장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89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의 각종 시설공사 리베이트와 교재구입비 명목 등으로 총 1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최순영 국회의원에게 2004년 11월에 제보하고, 최 의원이 같은 해 12월 1일에 이를 공개하였다.

김 씨는 경북 영덕여고(학교법인 조양학원)에 26년간 재직한 행정실 직원으로서, 박 이사장이 공사물품 구매, 단가 조작, 수량 부풀리기, 물품구입 허위 서류작성, 도로공사 보상금 전액횡령, 개인 자가용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기 등의 방법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비를 착복하고 있는 것을 제보했다.

1995년에 교장의 착복이 너무 심해지자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교장의 사과로 끝났다. 하지만 박 이사장의 부정행위

는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 김중년 씨는 2004년 6월 박 이사장의 비위사실을 정리한 내역서를 영덕여고 선생님들에게 폭로하고 비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교장, 이사장의 아들인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하여 협박과 회유가 이어졌다. 학교측은 협박과 회유가 통하지 않자 김 씨의 집에 찾아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 씨는 2004년 연말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04년 12월에 박 이사장을 1억1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고, 2005년 2월에 박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이사장의 유죄판결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0월 28일 해임되었는데, 다행히 대법원의 복직판결로 2008년 7월 복직하였다.

김중년 씨는 2005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5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32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하던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에 참여했던 류영준 연구원은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고 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문제를 2005년 6월 언론(MBC PD수첩 제작팀)에 제보했고 이 때를 전후해 참여연대에도 제보했다.

류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PD수첩 제작진은 수 개월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매매 난자와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됐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 후, 2005년 11월 22일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을 방송했다. 이를 뒤 황 교수는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원 난자이용' 및 '난자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연구 외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황 교수와 다수의 언론을 포함하여 황 교수를 맹목적으로 믿는 이들은 논문조작 진실규명을

매국행위로 규정하고, 제보자와 PD수첩 제작팀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PD수첩 제작팀이 김선중 연구원으로부터 중대한 진술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삼아서,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일을 봉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해 12월 초에 방영하려던 <황우석 신화 2탄>의 방영을 좌절시켰다. 다행히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황 교수 논문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시작했고, 결국 2005년 <사이언스>에 게재된 황 교수 논문의 '한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교수는 그 후 논문조작과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해 처벌받았고,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되었다.

한편 류 씨는 제보 이후 근무하던 원자력병원에서 물러났고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다행히 2013년에 강원대학교 의대교수가 되었으며, 2013년 말에서야 BRIC 웹사이트를 통해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등을 제보한 이가 자신임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류 씨의 제보와 PD수첩 제작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보자>가 2014년에 개봉되었다.

* 참여연대는 PD수첩 제작팀이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그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를 지원하였다. 류영준 씨는 2014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33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광주인화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전응섭 씨는 광주인화학교의 직원들과 교사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성폭력 사건을 2005년 6월 22일에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학부모 조 모 씨가 딸의 또래 친구인 A양이 행정실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전응섭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전 씨는 지역 시민

단체에 신고했다. 그 후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들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가 구성됐고, 2005년 11월 1일에는 MBC PD수첩을 통해 <은폐된 진실 -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었다. 방송내용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부모 아래서 자란 초등학교 5학년 청각 장애아 A양이 방과 후 과자를 준다고 행정실로 부른 교직원 K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가해자

8명의 교직원과 교사로부터 12명의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방송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검찰은 행정실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2006년 재단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242일 간 지속됐고, 2007년 학생들의 등교거부, 천막수업 진행 등 학교에 대한 항의는 이어졌으나 재단은 바뀌지 않았다. 성폭력 혐의로 직위해제되었던 교직원은 2007년 6월 13일 복직되었다. 오히려 대책위에 참여하였던 선생님들은 파면 임용취소,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고, 전용섭 교사도 대기발령 조치 후 해임되었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다.

2009년 공지영 작가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를 출간했고,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다. 인화학교 사건이 소설과 영화로 알려지자 재단설립 취소와 재수사, 성폭력범죄 공소



시효폐지 등 요구가 빚발쳤다.

2011년 11월 18일 인화학교의 재단인 우석재단에 대해 설립취소가 결정되었다. 검찰은 행정실장 김 모 씨를 기소하고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장애인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4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KT 동대구지사 동촌지점장이던 여상근 씨는 KT가 고시 기준을 고의로 위반하며 필요없는 공사를 진행해 국가지원예산 약 6백억원을 유용한 의혹을 2005년 8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회사에서 파면된 이후인 2012년 4월에 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여 씨는 KT에서 31년간 재직하면서 부장급 직위까지 승진했던 전기기술자이다. 2004년 동대구 지부장으로서 부임한 후 경부고속철도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잡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철도 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사업 업무를 보던 중 KT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잡음전압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전력유도대책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 씨는 이를 2004년 10월에 본사에 알리고 공사중단과 사용된 예산의 반납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여 씨의 건의를 묵살하였고, 여 씨는 2005년 8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경부고속철도 전력유도대책 비용 과다설계 및 집행을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청렴위는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고 감사원

에서는 국가예산이 낭비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전파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고시의 개정 등을 2006년 5월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허위사실 유포, 회사 경영진 비방 등의 이유로 2006년 6월에 여 씨를 파면했다. 다음 해 6월에 청렴위가 KT측에 파면처분취소를 권고했으나 KT는 불복했고 그 보다 앞선 5월에 KT는 여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이어가던 여 씨는 2012년 4월에 다시 불필요한 유도대책공사로 국가 예산을 낭비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T 등의 관계자를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2012년 말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2013년 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T 등의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청 수사와 1,300여 명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여상근 씨는 2006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6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07년 4월에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였다.

35 박경옥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패션센터 지부장이던 박경옥 씨는 대구지역의 전락사업이자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대구지역섬유진흥사업(밀라노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기관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에서 행해지던 비리와 부패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2006년 6월에 신고하였다.

박 지부장이 신고한 내용은 밀라노 프로젝트 관련 기관들이 정부보조금 횡령을 통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비를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조합의 정부지원금 불법비자금 조성, 특별회비 수입 위조, 각종 행사에 관계공무원

의 금품수수, 간부의 업무추진비 지급을 위한 출장 서류 조작,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장비도입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2003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33개 연구 과제를 수주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원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인건비 5억 8천 3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 전·현직 임원들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정부보조금 8억여 원에 대한 환수조치도 이루어졌다. 박경옥 씨는 2006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6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36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이재일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비와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을 2006년 4월 연구원 내부 감사실에,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 각각 제보했다.

이 연구원은 동료 연구원과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출장 계획을 만들거나 연구 계획을 위조하여 기안하고 금액을 타내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카드 사용, PDA 구입비 등에 유용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동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내부감사를 의뢰했다.

내부감사 결과 해당부서 직원 14명이 2004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800여만 원을 허위출장 여비로 횡령한 사실만 밝혀졌을 뿐 감사결과가 축소됐다. 연구원측은 이를 특정부서의 문제로 치부하고 연구원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였고 감사팀은 공문을 통해 오히려 제보자인 이 씨의 신분을 노출시켰다.

그 후 이 연구원은 공개적인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및 상해 위협,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피해로 괴로워하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도움을 받아 2006년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재신고했다. 청렴위는 조사를 통해 2004년 10월부터 21개월동안 직원 318명이 모두 1,235건의 국내 출장을 거짓으로 신고해 출장비 4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2006년 8월 해직된 후, 해직무효 및 손해배상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의 제보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선되었다. 이 연구원은 2007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7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37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로 재직하던 양시경 씨는 JDC가 평당 8만원 정도인 제주헬스케어사업 부지 30만평을 평당 15만원에 매입해 대토주에게 특혜를 주려했다는 사실을 2006년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양 씨는 제주헬스케어사업 부지의 토지감정가가 과다책정되어 200억원의 세금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현장실사와 시장조사 등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JDC 이사회는 내부기밀 유출을 이유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양 감사의 해임을 요청했고 건설교통부는 2007

년 3월 양 씨를 해임했다.

양 씨는 2007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해 2008년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건설교통부와 JDC 측의 항소로 4년간의 법정소송을 진행했다. 2010년 5월 19일 서울고법은 “양 전 감사가 제기한 문제가 진실에 부합돼 해임사유가 되지 않고, 해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JDC는 양 전 감사가 감사직으로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 등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9월 대법원이 JDC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승소가 확정되었다.

38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직원 황규한 씨는 전임자가 외교부 예산에서 조성된 주택임차료를 횡령한 사실을 2007년 4월에 국정원 본부에 제보하고 같은 해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도 신고하였다.

2006년 3월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가 살 집은 전임자인 이 모 씨가 이미 3년짜리 임대계약을 맺어둔 상태였다. 그런데 2007년 3월 집 수리 문제로 집 주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예산으로 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매월 임대료 2,500달러 중 500달러, 3년치 총 1만8천달러를 전임자인 이 모 씨가 주택보수비 명목으로 챙겨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 씨는 이 사실을 국정원에 보고하였다. 전임자인 이 모 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황 씨의 계좌로 횡령한 금액의 절반인 9천달러를 보냈으나, 황 씨는 이를 국정원 본부에 보냈다. 이 사건으로 전임자 이 모 씨는 2008년에 기소되어 그해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외교통상부는 사건 이후 재외공관에 이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계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황 씨는 2012년 6월 국민

권익위로부터 전임자가 무마 명목으로 황 씨의 계좌로 보낸 9천달러에 대한 신고 보상금 2백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황 씨의 제보를 받은 국정원이 수개월 동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황 씨는 2007년 6월 국정원 본부의 귀임 명령을 따르지 않고 8월 1일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8월 13일에는 부인 김 모 씨를 통해 비리를 은폐하려는 국정원을 국가청렴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해외근무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귀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7년 12월 20일에 그에게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황 씨는 2008년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황 씨가 의원면직을 했다고 주장하며 복직시키지 않았다.

* 참여연대는 황 씨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항소심)과 의원면직무효확인 소송을 법률지원하였다.

39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통해 50여억원 비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를 고위 검찰간부 등에게 로비자금으로도 제공했다는 점을 2007년 10월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제보했다.

김 변호사의 제보를 받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같은 해 10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비자금 문제를 공론화했다. 11월 3일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였고, 11월 5일 정의구현사제단은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이 전, 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 직후인 11월 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

인주 사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2007년 11월 23일에는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12월 20일에 조준웅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되었고, 특검의 수사 결과 2008년 4월에 이 건희 회장 등 10명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2009년 8월 14일 이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행위가 배임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수사는 차명으로 관리중이던 삼성생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발 당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악의적인 보도로 인신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비리를 공론화시킨 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났다. 더 이상 내가 할 말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공익제보 후 2008년 6월 변호사사무실을 열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은 후, 가족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다, 2011년에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임용되었다.

40 권태교 버스운전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서울 강북구 소재의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이던 권태교 씨는 버스회사가 버스요금수입을 서울시에 축소신고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낸 사실을 2007년 12월 방송에 제보했다.

권 씨가 제보한 내용은 2004년 9월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간운수업체는 서울시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구조를 악용하여, 버스회사측이 현금 승차비를 빼돌려 수입금을 축소하여 서울시로부

터 보전금을 더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버스회사는 승객이 현금 승차를 할 경우 서울시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버튼을 눌러야만 요금이 집계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낸 승객 수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대신 바둑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현금 승객을 축소 보고해 그 액수만큼을 횡령한 것이다. 경찰은 횡령 혐의로 버스회사 김 모 대표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권 씨가 제보자임을 알아낸 뒤,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내세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권 씨는 이후 버스·택시업체를 돌아다니며 30여 차례 이력서를 냈지만 업계에 퍼진 소문으로 3년 6개월 가량 재취업하지 못하다가 민주노동당 서울시위원의 협조 및 공익제보자모임의 지원 등으

로 버스에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었다. 권 씨는 2008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41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서울 양천고에 재직하던 김형태 교사는 양천고의 정 모 재단 이사장 등이 학교 돈을 횡령하는 등으로 수십억 원을 챙겼다고 2008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김 교사는 양천고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하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의 횡령이 있었다며 300여 페이지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김 교사의 제보를 계기로 2008년 5월에 감사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은 독서실비 9천6백여만원 부당징수, 급식실 사용비 1천1백여만원 미징수, 동창회비 3천3백여만원 부당징수 등을 확인하고,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징계조치는 경징계에 불과했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에 김 교사는 2008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정 모 이사장을 횡령과 사

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계좌추적 한 번 없이 2009년 2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학교측은 김 교사를 2009년 3월에 직위해제처분을 내린데 이어 8월에 다시 파면했다. 다행히 김 교사는 201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파면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았다.

김 교사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위원으로 당선되자, 이 때에 이르러서야 서울남부지검은 항고사건을 처리한다면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했고, 정 이사장을 급식업체를 통해 급식대금을 빼들려 5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0년 9월에 기소했다.

김형태 교사는 2009년에 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9회 투명사회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42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김이태 연구원은 2008년 5월 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연구원은 당시 대운하 관련 연구과제에 투입된 연구원이었는데, 정부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폐기하고 홍수예방 등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비밀스럽게 대운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김 연구원은 국토해양부 TF팀으로부터 매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논리를 개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정부가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연구원측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양심선언 당시에는 징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7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에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연구원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며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 외에도 연구원측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외부접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직을 강요했으며, 양심선언에 대한 해명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릴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김이태 연구원은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과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0회 투명사회상', 2014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와 보복행위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연구원측에 요구했다.

43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해군에서 근무하던 김영수 소령은 해군본부 간부들이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 사건을 2009년 5월경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그 해 10월13일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하였다.

2006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 소령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역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헌병대는 확인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 소령은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 타 부서로 전출되고 사병과 책임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시 제보했고, 청렴위는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

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에 다시 제보하였고 김 소령의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 소령과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지만 대전지검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시 10월에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소령은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나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 소령은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채용되었다.

김 소령은 2009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2009년 10월 그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김 소령을 지원하였다.

44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김동일 씨는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으로 2009년 5월 28일 국제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국제청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한상률 전 국제청장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계장의 사건은 조직의 부패 또는 모순을 외부에 알린 전형적인 공익제보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조직이 내부의 잘못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 내부자에게 파면과 고소고발의 형태로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조직적 탄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광주지방국제청은 2009년 6월 15일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전 계장을 파면했고, 이틀 후인 17일에는 명예훼손혐의로 김 전 계장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분명하다며 김 전 계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계장은 해임처분취소소송도 제기했고,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복직했다.

김 씨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김동일 계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김 계장을 지원하였다.

45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정부와 인천시가 출연해서 만들어진 (재)송도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던 이상돈 씨는 송도테크노파크에서 벌어진 허위시험성적서 발급과 각종 장비 부실관리 등을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에 2010년 4월에 신고하고 언론사 등에도 제보하였다.

이 씨가 제보한 내용은 정부와 인천시가 출연한 기업기술지원 공공기관인 송도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4,200여건의 허위시험성적서 발급, 기술지원 수수료 미수금 방치, 90억원 상당의 국가장비 부실관리, 연장근무 수당 체불 등이었다. 그 외에도 최초 제보 후 채용 등의 인사비리와 보수체계의 문제 등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측에도 알려 2010년 인천광역시 감사관을 이끌어냈다. 이 씨는 2009년 7월 입사하였고, 입사 2개월 후 재물조사업무를 하면서 송도테크노파크의 장비 대장목록과 실제 보유 장비에 차이가 있

음을 발견했다. 이 씨는 이를 부서장 등에게 보고했지만, 부서장은 함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후 이 씨는 입사 후 3개월 21일 만에 수습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아 해고되었다. 사측은 이 씨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심의 하루 전날 복직시켰으나, 2010년 2월 16일에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받았다.

사측은 이 씨가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하자 2010년 5월 17일자로 면직처리하였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와 인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었고, 2011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1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46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는 2010년 6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에 직접 출연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다.

방송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수개월 간에 걸쳐 김 씨를 사찰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공직자의 사기 진작 기강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전직 은행원으로 2005년 국민은행 퇴직 이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의 대표였던 민간인 김 씨를 사찰했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 자리와 지분을 포기하게 했다. 또, 법인카드내역 등 개인버리를 조사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게 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힘

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 씨의 폭로 후, 검찰의 1차 수사, 불법사찰 증거자료 폐기에 연루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과 그에 이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김 씨는 물론 여·야 의원과 그 주변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대상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영덕·포항출신으로 공식체계와 무관한 비선조직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것이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하거나 증거인멸에 관계된 이들의 다수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종익 씨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47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감리단장이었던 유영호 씨는, 시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 등을 2010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2009년 1월 군산시청은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해 4월에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에 착수했다. 유 씨는 4월 말부터 감리단장으로 감리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시공사가 예정에 없던 중대한 설계변경을 시도하는데, 유 씨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시공사가 원하는 시공방식은 각종 공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법이었어서 수락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시공사에서는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군산시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했고, 그 해 7월 유 씨는 감리단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공사기간도 애초 40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 들어 현대메트로타워는 2011년 9월에 완공되었다.

하지만 유 씨는 해임된 후 2010년 7월에 국민권익위에 부당한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을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국민권익위는 유 씨의 주장이 옳음을 확인하였다. 권익위는 시공사가 신청한 공사변경내용은 중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명의대여 불법행위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군산시에 담당공무원 등 5명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 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에 완공된 군산 현대메트로타워는 비가 새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 처했다. 2012년 2월 군산시의회가 구성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상당한 부실이

있었음을 확인한 후, 유 씨에 대한 명예회복, 책임감 리를 소홀히 한 감리회사 및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유영호씨는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015년 2월 5일 2심에서 일부 승소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군산시가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감리원 변경사실을 통보해서 유영호 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에 처했다며 위자료 지급도

명했다.

유영호 씨는 2011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1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2015년 6월 26일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당시 감리원 변경사실을 알렸던 관련협회 및 시·군·구에 잘못된 사실을 정정 통보하여 유영호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했다. 또한 2015년 8월 31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48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정부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이던 이용석 연세대 교수는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회사측 관계자로서 불법로비를 한 사실을 2010년 7월 2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참여연대에도 이를 알렸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은 전국 우체국 사이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기반망 사업으로 2010년 통신분야 최대 사업으로 모두 31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 선정은 ARS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나 선정 당일 저녁 10시에 SK텔레콤 측 박 모 단장이 이 교수에게 접촉을 했다. 박 모 단장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용역자문 계약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접근했고 평가가 끝난 당일에는 평가에서 1등을 했다며 사례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K텔레콤 박 모 단장을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중재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측의 조직적 행위로는 보지 않고 박 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교수는 2009년 8월에도, 경기도 파주 교하 신도시의 터키입찰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입찰 참가업체인 금호건설이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참여 업체의 터키 입찰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사실을 고발한 바도 있다. 그 공로로 2010년 2월 국민권익위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용석 교수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49 윤승훈 서울도시철도 직원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서울도시철도 직원으로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선전홍보국장이던 윤승훈 씨는, 서울도시철도 5호선 스크린도어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감전사고가 발생

하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CCTV영상을 2010년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윤 씨는 2009년 11월 18일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

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급속으로 된 출자로 스크린 도어 바닥판과 전동차 사이 간격을 측정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며칠 후인 11월 26일에 장애인 전동휠체어로 승차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측에서는 2009년 12월말 경부터 절연작업 등 보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였으나, 2010년 5월 10일 왕십리역에서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바닥판 사이에 빠지면서 스파크가 발생하고, 3cm 가량의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윤 씨는 2010년에 이런 내용을 취재하던 KBS기자에게 감전사고 관련한 CCTV영상을 제공했으며 2010년 8월 23일 KBS 9시 뉴스에서 <지하철 스크

린도어 감전사고 잇따라>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KBS뉴스 보도 후인 10월 8일자로 윤 씨를 직무의무 위반, 공사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파면하였다. 다행히 윤 씨는 2012년 4월 19일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하였다. 행정법원에서는 감전사고 CCTV 영상 무단반출로 윤 씨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여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법원이 사규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복직 2개월 만에 재징계에 착수해, 2012년 8월 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50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이던 이두희 씨는 2010년 11월 4일 장로회신학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목 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씨가 폭로한 내용은, 2010년 7월 23일에 실시된 군목시험 2차 시험(면접)과 관련하여, 면접시험 장소인 국군수도병원 내 베데스다 교회에서 베데스다 교회의 담임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소속의 한 모 중령이 이 씨에게 다가와 ‘면접 볼 때 한쪽 주먹만 살짝 쥐어라’, ‘예장 통합 애들에게만 이 지시를 전해라’, ‘그 외에 아무도 지시한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면접 시험 끝난 후, 한 모 중령과 W군목이 7명의 예장 통합 소속 응시자 중 먼저 귀가한 2명 외에 나머지 5명을 부른 뒤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할 것’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옷을 벗게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런 지시를 예장 통합 소속 응시자들에게

전달은 했지만, 본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먹을 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2차 시험 결과 예장통합 응시자 7명 중 4명은 불고, 이 씨를 포함한 면접 중에 주먹을 쥐지 않은 3명이 떨어졌다.

이 씨의 폭로 후 ‘군인권센터’가 그 해 11월 8일 감사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는데, 한 모 중령은 주먹을 쥐라고 지시한 것은 면접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국방부는 응시자들에게 시험부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그 해 12월 결론내리고, 한 모 중령에게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징계처분만을 내렸다.

이두희 씨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51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육군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황인걸 중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이 모 헌병단장의 공금횡령 등 부패와 비리를 승 모 당시 육군 중앙수사단장과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2010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제보하였다.

황 중령은 2008년경 후배 장교로부터 이 모 헌병단장이 부하장교들을 시켜 사건처리비, 군기순찰 중식비 및 진지공사 중식비, 민수용 차량 및 모터싸이카 정비유지 부품구매비, 격별 보수비, 사무기기 유지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을 오랫동안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2년 후 황 중령은 이 모 헌병단장이 헌병병과의 장군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해지자, 부패비리를 저지른 이가 헌병병과의 장군으로 승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 모 헌병단장의 공금횡령 사실들을 편지에 적은 후 곁봉투에는 가명을 쓰고 본문에는 자신이 헌병병과 소속임을 적어 당시 육군 중앙수사단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육군 중앙수사단장은 제보자 색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제보내용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황 중령은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제보했다.

황 중령이 제보한 내용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라고 확인되었다. 장군으로 승진한 이 모 헌병단장은 황 중령의 제보직후인 2011년 1월말 전역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1년 6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모 헌병단장을 민간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사건관계자의 대부분이 현직 군인이라 민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군 검찰에서도 자료를 민간검찰쪽에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사건을 이첩받은 민간검찰이 내사종결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국방부장관도 국방부 조사본부에 부패혐의 조사를 지시하면서도 그에 앞서 제보자 색출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2011년 1월말, 신분이 드러난 황 중령은 '익명제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해 8월에 감봉 3월 징계를 받았다. 황 중령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5월에 대전고등법원은 그를 공익제보자로 대우해야 하고 징계는 취소한다고 판결하였고, 그 해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그는 진급심사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아픔을 겪었다.

황 중령은 2013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13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52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양돈농장에서 농장장으로 일하던 박재운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농장을 운영하던 영농법인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돼지 두 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포천시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부당하게 많이 청구한 사실을 2011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였다.

박 씨가 제보한 내용은, 경기 포천군 소재 육가공업체인 C영농법인이 운영하는 양돈농장에서 농장장으로 재직하던 중, 구제역 발생에 따른 C영농법인 3개 직영농장 및 15개 위탁농장의 실제 살처분 돼지

두 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포천시 등에 보상금을 청구한 행위였다. 박 씨는 이런 부당한 보상금 청구 사실을 목격한 후 괴로워하다 사표를 낸 뒤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였다.

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C영농법인이 컴퓨터 조작 등을 통해 살처분 두 수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2012년 1월 2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구제역 의심 돼지 20,068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으나 포천시에는 9,500마리나 많은 29,570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고 신고했으며, 매몰 돼지들의 체중과 나이도 속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보상 예정액 104억원 중 28억 원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영농법인 간부 및 농장대표, 공무원 등 15명은 기소되었다.

한편 제보 후 박 씨는 배신자라는 비난과 비방에 시달렸고, 그를 도왔던 직원 2명도 권고사직을 당했다. 박재운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2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년 2월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53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한국유나이티드제약회사에 근무했던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하였다. 제보 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최성조 씨는 2016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실에 다시 제보하였다.

2011년 최성조 씨의 제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해 9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9개 품목을 허위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또 검찰은 2013년 5월 원료의약품 밀수입 및 부정수입 혐의를 적용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벌금 및 추징금을 총 9억 5천만 원을 약식 청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최성조 씨는 2010년 5월 "회사가 성과를 불법으로 창출하며, 비리와 편법, 문서위조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었으나, 최성조 씨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사에 반환하였다. 제보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제보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며 최성조 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54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0년에 치러진 2011학년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다가, 학교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그 밖의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1년 5월 15일에 강원도교육청에 제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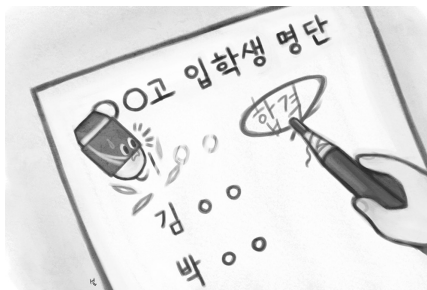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교육청은 2011년 6월 경 감사

에 착수하여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도 교육청은 같은 해 7월 25일 학교가 면접 전에 미리 합격자를 내정했으며, 내정한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2단계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연필로 학생의 점수를 매긴 것을 면접관이 면접 당일 불펜으로 덧쓰고 연필자국은 지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게 하도록 면접 평가 점수를 ± 0.3 점 범위내로 제한했으며, 이를 통해 내정된 학생의 95%(132명 중 126명)를 합격시

켰고, 교사채용에도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임시부정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비리행위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한 반면, 박 교사는 2013년 4월에 파면하였다. 다행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지만, 재단은 9월에 다시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12월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며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 박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5년 4월 29일 법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소송을 취하였다.

박 교사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부패신고서를 보면, 본인이 입학전형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부정에 관여해 했다는 사실을 밝혀, 본인의 처벌도 감수하겠

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박 교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비리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공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과 재단의 보복성 징계 가능성이 큼을 사전에 알고서도 공익제보를 한 것이다.



박 교사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55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차량관리원이던 신춘수 씨는 2011년 5월 8일에 발생한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광명역 부근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을 일으켜 해당 객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의 원인이 엔진고장때문이라는 점을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했다.

신 씨가 제보한 것은 사고 차량의 엔진 커버 한쪽과 베어링이 부서졌다는 사실과 주행규정거리를 초과했음에도 엔진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철도공사 직원 박 모씨가 회사보고용으로 엔진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찍었고,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장이기도 했던 신 씨가 철도노조에도 알리기 위해 이 사진을 받았으며, 철도노조 쪽은 이 사진을 이 사고를 취재하던 MBC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도록 하였다. 당시 사측은 과열된 엔진을 식히기 위해 속력을 줄여 달렸을 뿐 엔진고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결국 사고원인을 은폐하려 했던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철도공사는 '철도안전

특별대책'의 형식으로, KTX 운행 횟수를 줄여 KTX-산천을 정밀 조사토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 KTX-1 차량의 노후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측은 업무상 비밀과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규를 위반했다며 2011년 8월 23일 신춘수 씨와 박 모 씨를 각각 해임과 징직 3개월에 처했다. 신 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그 해 12월 19일에 징계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첫 보호조치 결정이었다.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다행히 사장이 바뀐 후 2012년에 그를 복직시켰다.

신 씨는 2011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56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소년원(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배현봉 씨는 보호관찰소측이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11년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배현봉 씨가 제보한 내용은 2011년 10월 30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소년원, 그들의 도가니>에 방영되었다. 배 씨는 소년원(보호관찰소)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위를 제보했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년원 실상에 대해 증언하였다. 배 씨는 방송 후 시작된 법무부 인권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법무부는 이후 소년원 및 교도소 입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

는 등 인권 보호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제보 및 방송출연 후 그의 신분이 드러났고, 그는 마약검사 대상자에게 마약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2년에 기소되어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4년 6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년 4월 23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배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했지만 법무부는 배 씨를 2015년 8월 31일자로 수원 보호관찰소로 전보발령 내렸다.

57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서비스품질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윤상경씨는 2010년부터 본부장급 50만원, 부장급 30만원씩 각출하여 자금을 조성해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골프장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2월 25일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보하였다.

제보를 접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3년 3월에 점검을 한 결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개발원 내 39명의 본부장 및 부장들이 1인당 30~5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1천5백만 원을 각출하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간식 및 식대, 택시비와 유흥용으로 사용했으며 보건복지위 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무총리실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에 이같은 행동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 행동강령 18조 위반임을 확인하고 자금사용 내역을 고의로 폐기한 자는 중징계, 자금각출을 지시 주도한 자는 경징계 요구하고 개발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2012년 7월에 윤 씨를 임시조직인 중장기 발전계획추진단의 사회서비스분과 TF팀장으로 발

령했는데, TF팀의 사무공간은 기존 직원 휴게실 안이고, 팀원도 1명이 배치되는 것에 불과해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준 것이었다. 개발원은 한 달 후인 8월 29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윤 씨를 파면했다.

윤 씨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던 8월 14일에 국민권익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며, 권익위는 2012년 11월에 파면처분 취소요구 결정을 내리고 불이익처분을 한 개발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발원이 권익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3년 11월에 기각하였다. 개발원은 윤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지만, 2013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년 4월 그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씨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58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KT새노조위원장이던 이해관 씨는 2011년 뉴세븐 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전화망 안에서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인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사실을 2012년 2월에 언론에 제보하고,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도 제보하였다.

이 씨는 KT가 001-1588-7715라는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가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홍보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지만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이를 2012년 2월 언론사에 제보하고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KT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최종 투표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씨는 요금고지서 등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러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인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아, 4월 3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첩했고,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2012년 12월에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에 통보했다.

제보 후 KT는 이해관 씨를 2012년 5월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수용해 KT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KT는 권익위의 두 차례의 보호조치 결정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KT는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판결로 복직하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KT는 이해관 씨에게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내렸다.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권익위는 KT의 감봉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9일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2 의인상'과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2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이해관 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2016년 3월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하는 등 이 씨를 지원하였다.

59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이용호 비서관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2012년 3월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2009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연루되었고 2010년에 기소되었다. 반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만 기소하는데 그쳤다.

장 씨는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

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었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장 씨가 증거인멸의 책임을 지게 되고 정작 주도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총리실 류총렬 관리관, 고용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주도자들은 돈을 건네며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했다. 이에 억울함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 씨는 2012년 3월에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폭로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

였다.

장 씨의 제보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그 해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6월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추가 기소하였다. 장 씨도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의 양심고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장 씨는 2013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형사처벌로 파면당한 그를 돕기 위한 모임인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2014년에 결성되었다.

60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의 학교비리 제보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안종훈 교사는 학교가 교직원 자격이 없는 이를 학교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고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4월에 서울시 교육청에 알렸다. 안 교사가 제보한 내용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교직원 A씨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2011년 11월)되어 교직원 자격을 잃었고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학교회계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학교측이 계속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급여도 학교회계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보를 접한 서울시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동구마케팅고를 포함해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안 교사가 알린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교육청은 그 외에도 10건이 넘는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교직원 A씨에 대해서는 퇴직시킬 것을 학교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학교측은 2013년 3월에 제보자가 안 교사임을 교직원들에게 공개하고, 2014

년 8월에 안 교사를 파면했다. 안 교사는 같은 해 9월에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파면취소결정을 받았다. 안 교사는 파면처분취소 결정으로 2014년 12월 복직되었으나 학교는 2015년 1월 안 교사를 다시 파면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차 파면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측의 파면처분이 정당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는 복직한 안 교사에게 교과수업은 배정하지 않고 청소지도 업무, 학생중식지도 업무만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2015가합24397).

이처럼 그간의 징계와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되었지만 학교측은 2016년 3월 안 교사에게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월과 9월 직위해제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안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

* 참여연대는 제보자의 신분노출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팀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서울

시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안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514명의 시민 요청서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4년 11월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차 파면 당시에도 학교 측의 파면조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3,653명의 시민 의견서를 2015년 4월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

했다. 2016년 9월 28일에는 안종훈 교사의 직위 해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1,150명의 시민 서명과 요구서를 동구학원에 전달하였고, 2016년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서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61 흥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종교사학인 명지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흥서정 씨는 학교가 종교수업 대체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종교수업을 강제로 들어야만하고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헌금 납부 등을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2012년 7월에 서울시교육청(인권교육센터)에 제보하였고, 같은 내용을 언론사에도 제보하였다.

제보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에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해 9월에 명지고를 대상으로 학생인권 인착화를 위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청에 종교수업 대체 교과목 개설을 약속하였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제보자를 비난하고 면담을 명목으로 제보자의 부모를 부르는 등 제보자를 압박하였다. 대체수업과목도 명목상으로 개설은 하였지만,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종교수업을 듣도록 설득하도록 함에 따라 대체수업을 흥 씨 혼자서 듣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같은 학교측의 압박에 못 이긴 흥 씨는 그해 11월 학교를 자퇴하였다.

흥 씨는 그 후 청소년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2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62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에서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던 정진극 씨는 포스코 및 포스코 계열사가 동반성장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2012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였다.

정 씨는 포스메이트 내의 강압적, 폭력적인 사내 조직문화와 시간의 근무수당을 개인에 따라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등의 부당한 사내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포스코 윤리경영실의 온라인 신문고 시스템에 해당 문제들을 신고하였으나 그가 제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사내에 노출되어 사내에서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 건을 포스코 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공익신고하였는데, 오히려 신고 이후인 2012년 9월 초 징계위에 회부된 후 해고당했고, 9월 말 국민권익위 등에 동반성장 관련 허위자료 제출 건을 제보하였다.

다음 해인 2013년 7월 권익위로부터 조사통보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9월 30일에 <㈜포스

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자료 하위제출 관련 조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포스코에 대한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고, (주)포스코를 2013년 하도급 거래실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정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무효결정을 받았고, 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결정청소 소송 1심에서도 2014년 4월에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지만, 회사가 항소하여 회사에 복귀하지 못했다.

정 씨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에 정진극 씨와 함께 동반성장 허위자료 제출과 제보자에 대한 탄압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같은 해 10월과 다음 해 4월에 그를 복직시킬 것을 포스코측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63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대령은 여러 업체들이 군 PX(매점) 물품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치 매우 싼 할인가격으로 군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국군복지단 김 모 소장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였다는 점을 2012년 10월 국방부 감사관실과 감찰단, 2012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하였고, 2014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였다.

민 대령은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기재한 허위영수증을 제출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여 입찰 평가 점수를 높게 받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업체 제재 및 판매가격 재산정을 국군복지단장 등에게 요청하였고, 2012년 10월에 국방

부 감사관실에 제보하고, 11월에는 국방부 감찰단에도 제보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과 제보는 모두 묵인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에 민 대령은 2012년 11월 중순에 권익위에 제보하였다.

민 대령의 제보내용을 조사한 권익위는, 2013년 4월에 국군복지단 납품비리와 입찰 비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였다. 하지만 국방부의 비협조로 용산경찰서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공정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민 대령은 다시 2014년 2월에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였고, 서울서부지검은 2014년 10월에 군납물류대행업자 1명과 금품을 수수한 국군복지단 근무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입찰비리 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64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충청북도에 소재한 쓰레기 소각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은,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업체인 GS건설 소장이 2010년 하순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고 자신들이 이같은 부당한 지시를 실행했다는 사실을 2012년 10월말 당시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실에 제보하고, 11월 1일 장하나 의원과 공동기자회견

을 통해 양심선언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특히 염화수소(HCl)의 농도는 20ppm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했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은, 염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 중간 부위에 자동측정기(TMS)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측은 염화수소의 농도가 100ppm까지 상승함에도 소각시설개선을 통하여 오염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대신, 외부공기를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TMS 측정값을 고의로 낮추었다.

이들의 제보 후,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대기오염측정 조작을 지시한 상사들과 하청업체인 회사, 그리고 원청업체 GS건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은 관계자들을 약식기소하였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들 제보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는데, 다행히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익신고자라 판단하여 불기소하였다.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은 2014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65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2012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평강씨는 소방감 승진인사에서 탈락하여,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게 자신의 승진탈락을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3월, 4월 감사원과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심 씨가 감사원에 신고한 내용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차장 재직 시 승진을 빌미로 한 금품요구, 향응수수, 직부관련자와 접대 골프 의혹 및 부하 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 지시, 소방방재청장 취임 후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심 씨의 신고로 감사원은 2012년 8월 27일 ~ 10월 19일까지 소방방재청에 대해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을 실시하여, 이 청장의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및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심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소방방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11월 심 씨를 직위해제한 후 12월 해임처분 했다.

또한 이 청장은 심 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2015년 9월 선고)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11월 심 씨의 신분 보장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 청장의 향응수수(식사 접대) 사실을 밝히고, 심 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신고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단해 2013년 2월, 소방방재청장에게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소방방재청(현재 국민안전처)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 심평강 씨는 2015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5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66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상욱 씨는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들처럼 행세하며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2012년에 제보하였다.

김 씨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오피스텔 현장을 급습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김 씨는 12월 17일,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해왔고 이 조직이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김 씨의 제보는 그 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범국민적인 진상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그의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도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등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이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국정원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때에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을 김 씨가 위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없이 공표했다고 국정원직원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여 2014년 7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김 씨가 공직을 대가로 제보를 했으며 김 씨의 행동을 폄하하는 기사를 2013년 6월 11일에 내보냈으나, 2014년 2월28일 해당 기사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정정보도를 냈다.

김상욱 씨는 2014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검찰이 김상욱 씨를 기소하기로 발표한 2013년 6월에 기소를 취소하라는 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2014년 6월에는 시민 1,264명의 서명을 받은 김상욱 씨 무죄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 김상욱 씨는 2014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67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 고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수원여자대학교 이재혁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에서 근로관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기사화한 중부일보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입료, 노조원들이 농성에 대비하여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등을 지출했다.

당시 수원자대학교 직원으로 기획팀장을 맡고 있던 김철우 씨는 2012년 12월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

였고,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고발 당시 김 씨가 수사기관에 내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김 씨를 2015년 1월 28일 파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와

2015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 준수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이재혁 총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68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강원도 평창군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하던 김담이 씨 등 보육교사 3명은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료 및 급간식비 횡령 등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2013년 2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청, 평창군청 등에 제보하였다.

이들의 제보를 접수한 평창군청은 조사에 착수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6명의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육료 및 급간식비 명목의 보조금 120여 만원을 더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평창군청은 3월 14일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 반환 및 원장 자격정지 45일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평창군청과 새로 어린이집 운영위탁계약을 맺고 부임한 원장이 3월 27일에 실시한 보육교사 신규채용과정에서 탈락되었다. 이들 중 1명은 2013년 6월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으나 원장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랫동안 실직상태이며, 김 모 교사는 2013년 6월 24일에 국민권익위에 신청한 신분보호조치의 결과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김 모 교사 또한 원장이 권익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실직상태를 겪다 2014년 10월에서야 원직복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김담이 씨는 신규채용모집에 응하지 않았기에 권익위의 신분보호조치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김 씨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다른 보육교사들은 채용해달라면서 신규 채용에 응하지 않은 것이었다.

김담이 교사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김담이 교사 등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신분보호조치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69 흥진희 씨의 영혼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영혼국제중학교에 다녔던 자녀의 학부모였던 흥진희 씨는 영혼국제중에 입학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학교측이 요구

했다는 사실을 2013년 3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2013년 1월 하순 성적조작 등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한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었는데, 홍 씨는 자신의 자녀가 2008년말에 영훈국제중 일반 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는데 학교측에서 2009년 2월에 전화를 걸어와 입학의사를 물으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요구했고 고민 끝에 1천만원을 제공했더니 실제로 입학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했던 것이다.

그 후 검찰은 성적조작을 통한 입학부정 사실과 함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밝히고 2013년 7월에 김 모 전 이사장을 비

롯해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을 기소했고, 김 모 이사장 등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홍 씨는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영훈국제중과 같은 재단 계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딸의 신분이 노출되어, 딸이 교사 등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고초를 겪었고 홍 씨의 딸은 2013년 12월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다.

홍 씨는 2013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3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70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2012년 12월에 발각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과장은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부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2013년 4월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권 과장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던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한 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경찰 수사 담당자였다. 권 과장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3년 2월에는 수서경찰서에서 송파경찰서로 전보발령되기도 했는데, 같은 해 4월 18일 경찰이 국정원 직원 2명, 일반인 1명만을 정치관여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직적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고 종결하자, 다음 날인 4월 19일 언론을 통해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폭로하였다.

권 과장이 폭로한 내용은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위해 78개 키워드 검색을 의뢰했지만 서울경찰청은 4개 키워드로만 축소했고,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2대에 대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분석결과가 수사팀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수사책임자인 권 과장조차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라며 배포한 보

도자료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서울청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핵심 증거물을 수사팀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 등이었다. 권 과장은 같은 해 8월 30일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지휘부가 김하영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도 증언하였다.

권 과장은 폭로 이후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다 2014년 경찰에서 퇴직하고 2014년 7월에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권 과장은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2014년 2월에 권은희 과장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내는 '힘내라 권은희' 시민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 1,782명의 응원메시지를 받아 전달하였다.

71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던 김웅배 씨는 본사측이 대리점주들에게 가하는 횡포에 시달리던 중,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전화통화 음성파일은 2013년 5월 3일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였다.

김웅배 씨는 2000년 6월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대리점주인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강요했고 그 수량은 대리점에서 소화할 수 없는 양이었다. 판매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해야 했던 김 씨의 상황은 다른 대리점주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갑을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김 씨는 물품강요에 대해 본사 직원과 전화 통화하던 중 본사 직원으로부터 갖은 욕설과 막말을

들었는데, 김 씨는 우연히 녹음된 이 통화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씨는 통화를 하다가 볼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다가 우연히 녹음됐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남양유업 대리점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개하였다고 한다.

김 씨가 2013년 5월 3일 본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남양유업 회장은 직접 사과한 후, 같은 해 7월 18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는 피해보상기구에서의 실질 피해액 산정·보상, 불공정거래 행위 원천 차단, 상생위원회 설치,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을 합의하였다. 김 씨는 대리점을 그만두었지만, 피해대리점 협의회 활동을 지속하였다. 김 씨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72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실 등 제보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가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수당 갈취,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 제보하였으나 행정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를 진정했다.

인권위는 2013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보조금 횡령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진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후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 해임 및 인강원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임원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어 문제가 된 운영자들이 교체되었고, 인권위의 형사고발로 관련자들이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강재단은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하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김정미 씨는 제보를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하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조치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피해를 호소한 발달장애인들이 제보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협박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했다.

73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육군28사단 포병연대 소속 김재량 상병은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때문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2014년 4월에 지휘관에게 제보하였다.

2014년 4월 6일 오후에 윤 일병이 쓰러졌고 그 직후 연천의료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날 오후에 숨졌다. 그러나 윤 일병을 장기간에 걸쳐 폭행해왔고 4월 6일에도 윤 일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던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말을 맞추고 폭행 사실 등을 은폐하고자 했다.

그날 저녁에 폭행가담자 중의 한 명한테서 폭행때문에 윤 일병이 쓰러졌다는 것을 들은 김재량 상병은 폭행가담자로부터 사건은폐에 가담할 것을 부탁받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폭행가담자가 자신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 상병은 그날 밤 10시가 넘는 시각에 본부 포대장인 김 모 대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윤 일병이 이 모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고 제보하였다.

김 상병의 제보를 접한 김 모 대위는 곧장 폭행가담자들을 면담조사하였고, 의무대에 입실해있던 김 모 일병으로부터 구타목격 사실을 진술받았다. 다음 날 현병대는 폭행가담자들을 조사하고 이틀 후 폭행가담자들을 상해치사와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이처럼 포대장에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폭행사건임을 알린 김 상병의 제보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단초가 되었다.

김재량 씨는 2014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74 김경준 사회복지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외교부에서 사회복지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경준 씨는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2014년 5월 제보하였다.

김 씨가 제보한 내용은,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자신들의 정기적인 부서 점심식사모임이나 저녁 회식을 하면서도, 마치 기자들이나 외부단체 사람들과 업무협의 식사모임을 가진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제보내용은 사실이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현직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장 2명을 비롯해 6명이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의 명단 등을 이용하여 과 회식 후 회계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46회 1

천1백24만원의 사업(업무)추진비를 부당청구해 사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김 씨의 제보내용을 포함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이런 사실을 2014년 8월에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2014년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외교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밝혔다. 김경준 씨는 2014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김경준 씨의 제보사실과 그에 대한 외교부의 불이익 조치 시도 등을 접한 후, 2014년 8월에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데 이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도 중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외교부장관에게 보냈다. 또한 2014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줄 것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였다.

75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동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하고 이익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김동은 씨의 제보로 서울시가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4.5.20~6.10)한 결과, 제보내용은 상

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센터장이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한소리회에 센터장, 행정팀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 * 김동은 씨는 2015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5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76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이상훈, 배재흠,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2013년 3월 19일 수원대학교(이하 수원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를 구성하였으나 이인수 총장과 학교당국은 교협 소속 교수를 색출하고, 교수들에게 교협 반대 서명을 강요하는 등 교협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수원대 교협은 2014년 2월 7일 고운학원과 이인수 총장의 학교 운영의 문제점(횡령, 배임 등), 총장 장남의 수원대 허위 졸업증명서 발행, 총장의 자질문제 등을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2월 10일~25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33건의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을 발표했다.

수원대 교협과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7월 3일 이인수 총장을 1차 고발하였고, 8월 7일 감사원의 수원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고발, 8월 10일 업무상 횡령죄,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3차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년 11월 25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교협은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마저 검찰이 기각해 재항고했다.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교수는 2014년 1월 14일 파면통보를 받았다. 배재흠, 이상훈 교수는 2016년 8월 대법원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복직되지 못한 채 정년에 이르렀고, 이원영, 이재익 교수는 2016년 9월 18일 대법원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장경욱, 손병돈 교수는 2013년 12월 27일 재임용 거부를 당하여 2016년 5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수원대는 장경욱 교수만을 복직시키고 손병돈 교수는 재차 재임용을 거부했다. 손 교수는 다시 2차 교원소청 심사를 제기하여 2016년 7월 승소했으나 수원대는 이에 불복해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7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운영 위탁업체 제이씨데코코리아(주)(이하 원청업체)와 계약한 청소 하청업체 (주)에버가드(이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던 유경원 씨 외 7명은 2014년 7월 높이 약 3m의 버스정류소 지붕을 청소해야 함에도 업체가 안전벨트나 안전고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전기배선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우천 시에도 물청소 등을 실시한 사실 등을 서울시에 제보하였다(1차 제보). 이들은 또 2015년 1월 원청업체가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여 청소횟수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는 사실을 서울시에 제보하였다(2차 제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1차 제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고, 2차 제보는 계약관계 부패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경원 씨 외 7명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였다. 서울시가 2014년 11월 원청업체

에 지붕청소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여 원청업체는 고소차(스카이차)를 이용한 안전청소방안을 제출하였으며, 2015년 2월 원청업체에 해당 협약에 따라 청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이므로 협약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1차 제보 이후인 2014년 9월 하청업체는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 7명 중 2명을 대기발령했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자 2014년 10월 “직간접적 막대한 피해와 업무상 손실”을 끼쳤으며 제보자들에게 고용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다. 이후 신규 하청은 제보자들을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 대상으로 보고 원거리 전보 등 불리한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제보자들의 신분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78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빛원자력발전소(이하 한빛원전)의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일진방사선 엔지니어링(주)) 직원이던 전용조 씨는 2014년 9월 한빛원전 6호기에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에 제보하였다. 또 2015년 1월에는 한빛원전 6호기 격납 건물 안에서 작업자가 방사선 안전 관리자 없이 출입한 사실을 광주KBS에 제보하고, 같은 해 2월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방사선 감시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체 방사선 폐기물을 무단 배출한 사실을 광주MBC와 국회 안전행정부 소속 권은희 의원실에 제보하였다.

전용조 씨의 제보로 한빛원전 내부감사가 실시되

어 한빛원전의 격납 건물 출입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액체 방사선 폐기물 무단 배출한 데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이 부과되었다.

한편 전용조 씨는 2013년 10월 본인을 포함한 해당업체 직원 13명의 근로 계약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전용조를 포함한 6명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되었다.

79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홈플러스(주) 세종점 현장 소방감리를 맡은 감리원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준공도면에 없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된 문제를 2014년 10월 20일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다.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의 소방감리 용역계약업체 ((주)○○소방) 소속 직원으로 홈플러스 세종점 신축공사와 관련된 현장 소방감리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A 씨는 2014년 11월 매장 개점에 맞춰 10월 14일 소방본부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이 준공도면에 없는 지하 1층, 지상 1·2층 칸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칸막이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

고 홈플러스 세종점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10월 20일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다. 세종소방본부는 10월 21일 현장조사를 진행해 문제를 확인하고 홈플러스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신고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은 감리업체인 (주)○○소방과 감리원 A 씨를 용역계약 위반을 내세워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고, (주)○○소방은 2014년 11월 17일 A 씨를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홈플러스 담당자에게 신고자가 A 씨라는 것을 세종소방본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해 듣고 2014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 신원 노출 경위 조사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80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 제보

H대학 oooo연구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용역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연구원 A씨는 소장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반환받는 등의 회계부정 사실을 2014년 11월, 12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소장이 연구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연구소를 감사한 결과 미승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허위지급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5년 4월 해당금액을 환수(11,051,380원)조치하고, 2015년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가 시작되자, 소장은 A 씨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고 하는가 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A 씨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근무를 한 이후부터는 A 씨를 회계업무에서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했다.

더욱이 다른 직원들의 경우 1년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된 것과 달리 A씨는 담당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학교측은 2015년 7월, 계약기간 만료 해임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A씨는 학교측과 용역과제가 종료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권익위에 요청한 신분보장조치신청을 취하였다. 그러나 A 씨의 제보로 학교가 소장을 교체하고, 서울 사무실을 폐쇄함에 따라, A 씨는 경기도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참여연대는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81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의 임의설계변경, 예산전용 문제 제보

한국남동발전(주)(이하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소에 근무 중이던 A씨는 상사와 동료직원의 임의설계변경, 부당한 예산 전용, 하도급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2015년 2월 25일 '레스히슬(익명제보 시스템)'에 제보했다.

남동발전 감사실이 A 씨의 제보내용을 조사한 결과, 제보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A 씨의 제보로

남동발전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간부와 임의설계변경 및 서류위조와 공사비 과다 지출에 관여한 직원을 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이를 신고한 A 씨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처리를 문제 삼아 징계(견책)처분하고 영동화력발전소에서 500km 떨어진 삼천포화력발전소로 강제인사발령을 내렸다.

82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충암고 A 교사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 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8월 까지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 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

리고 교육청은 학교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암고는 2015년 7월,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다가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으나 2016년 1학기 입학식 직후 A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시켰다

- *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 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충암고가 제보교사를 2016년 1학기 입학식 직후 담임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경위조사와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 충암고 교사는 2015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5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83 장성현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 제보

재향군인회에서 공보관으로 근무하던 장성현 씨는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를 2015

년 6월 국가보훈처 등에 진정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6월 말 노동조합을 결성

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의 특별 감사를 통해 사실을 밝혔고,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이끌어 냈다.

조남풍 회장은 2015년 4월 취임 이후, 재향군인회 재정을 총괄하는 경영본부장 자리에 향군 에 790 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횡령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업체 대표의 측근을 임명하고, 선거캠프 인사들을 무더기로 채용했다. 선거 과정에서 조 회장은 대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당선됐다는 의혹 이 제기됐다.

당시 비서실 공보부장이던 장 씨는 2015년 6월 다 른 부장급 직원들과 함께 부장단 명의로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해 문은 공개질의서를 조남풍 회장에게 보냈고, 6월 11일 국가보훈처, 6월 17일 감사원, 6 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장 씨는 6월 말 노동조

합을 결성하여 7월 28일 청와대에 2차 진정서를 제 출하고, 국가보훈처에는 조남풍 회장의 직무정지 요 청서를 8월 3일, 9월 2일 2회에 걸쳐 제출했다. 또 한 장 씨와 노조는 조 회장 선거캠프에서 대의원들 에게 금품을 부린 내역이 적힌 메모지를 입수하고, 조 회장의 각종 비위를 조사해 결국 8월 검찰에 고 발해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다.

국가보훈처는 장 씨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2015년 6월 26일~7월 14일까지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별감 사를 실시하여, 조 회장의 비리를 확인하고 관련자 들의 임용을 즉시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장 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자, 2015년 8월 장 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 여, 10월에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리고, 노조 관계자를 승진에서 누락하는 한편, 각종 명예훼손으 로 고소했다.

84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전경원 교사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성적을 조 작하여 남녀 합격생을 바꾸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사실은폐 등의 문제를 학교측에 여 러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3 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은폐 문제를 진정하 고,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 했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 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 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침묵시위 를 하며,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학교측은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전 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시 교육청이 2015년 9월 14일~10월 7일까지 특별감 사를 진행한 결과, 전교사의 제보내용은 모두 사실

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조작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2011년 발 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 하지 않은 채 학생 간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자체종 결 처리하고, 정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 지 않고 면담만으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 고,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 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 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 에 고발했다.

이처럼 전 교사의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하나고는 2016년 10월 31일 전 교사를 해임했다.

- * 참여연대는 학교와 일부 학부모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사퇴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평, 서울시교육청에 제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보자 보호측면에서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전경원 교사는 2015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5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85 A, B 간호조무사의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06년부터 2015년 2월 중순까지 다나의원에서 근무하다 이직해 K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A 간호조무사는 2015년 10월 경 진료 차 다나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다나의원 내원 환자 18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염환자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한 A 간호조무사는 당시 다나의원에 근무 중이던 B 간호조무사와 함께 병원측에 대책을 물었으나, 도리어 다른 환자들에게는 감염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A, B 간호조무사는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양천구는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5월 이후 내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00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건 중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다나의원 원장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면허자인 부인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인 면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신고 후 A 간호조무사는 신분이 노출되어 다니던 K한방병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의 영업정리(직장폐쇄)로 퇴사처리가 됐다.

86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소맥전문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에 근무하던 조한준 씨는 2016년 4월 4일 업체가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방충·방습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중 원료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썩은 밀가루를 전분 제조에 같이 사용한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직접 증언했다.

조한준 씨의 제보로 권익위와 관리당국인 논산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논산시는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은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업체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했다. 2016년 12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한준 씨는 제보 이후 업무상 피해를 받게 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진 퇴사하였다.

2016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활동소개

올해에도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
아름자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1. 2016년 5월 30일~7월 8일까지 6주간 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회의를 거쳐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총 1억7천만 원 생계비 지원을 확정함.
2. 지원 대상 15명 중 8명에게 월 200만원, 3명에게 월 150만원,
4명에게 월 100만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급. 희망할 경우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법률지원을 신청한 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변호사 상담을 지원함.
3. 한국일보와 언론기획을 추진해 정부의 구조금 제도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구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함.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 과제 점검

입법 미비로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고
법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진행

공익제보자 지원활동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기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하는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KT의 전화요금 부당 청구 의혹을 제보한 이해관 씨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를 제기
이해관 씨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 권익위의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음
KT에게 보호조치 이행 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KT를 압박하여, 이해관 씨의 징계처분 취소를 이끌어 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안종훈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1,150명의 시민 서명과 요구서를 동구학원에 전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서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서 발송.

충암고 학교급식 비리를 제보한 교사

충암고가 제보교사를 2016년 1학기 입학식 직후 담임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경위조사와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논평 발표.

하나고등학교 임시부정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철회를 요구한 논평 발표.

참여연대 의인상 / 의인기금 소개

참여연대 의인상

국가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양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 시민단체 등에 알려 거짓과 잘못을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됨

역대 의인상 수상자

- 2010 김동일 / 김영수 / 김이태 / 김종익 / 김형태 / 이두희 / 이용석
- 2011 유영호 / 영화 <도가니>(디딤돌상)
- 2012 박재운 / 홍서정 / 심태식, 민경대 / 이해관 / 故 박대기(공로상)
- 2013 김담이 / 김용배 / 박은선 / 윤상경 / 정진극 / 권은희(특별상) / 스노든(특별상)
- 2014 김경준 / 김상욱 / 김재량 / 류영준 / 쓰레기 소각업체 직원들
- 2015 총암고 교사 / 전경원 / 심평강 / 김동은

참여연대 의인기금

공익제보자 등 불의를 외부에 알리거나 사회적 정의를 세운 사람들을 칭송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공익제보자의 사회적 발굴 및 지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2011년에 조성한 기금임

의인기금 주요 사용처

- 의인상 수상자에 대한 상금 수여
- 공익제보자 보호 시민 캠페인
- 공익제보자들을 기억하는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 사업

의인기금 후원

기금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